

# ‘선거구 지각 확정·현수막 금지’ 비현역 출마자 분통

### 전남 10곳 중 8곳 선거구 조정돼 법정시한 위반 국회에 “사죄하라” “현역의원에 유리한 선거법” 비판

오는 12일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의 예비후보등록일을 시작으로 선거레이스가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구 지각 확정과 현수막 홍보 금지 등으로 비현역 출마예정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구 확정안을 놓고 전남지역 정치권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특히 전남

지역 10곳의 선거구 중 8곳의 선거 지형도가 조정되는 만큼 선거구 확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신인들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선거구 지각 확정에 불만이 정점에 달한 모습이다.

나주·화순 출마예정자인 최용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전날 SNS를 통해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는 물대나라 바빠 예비후보 등록이 코앞까지 다가온 현재까지도 안을 합의하지 못했다”며 “시험이 코앞인데, 시험 범위와 문제까지 현역의원들이 결정하겠다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비판

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나 무렵 시간에 여야가 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선거구 확정 과정에 국회의원들의 개입을 막는 정치개혁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구 확정안을 놓고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내년 총선이 역대 최대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확정안이 발표된 직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구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등 입지자

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일례로 영암 무안신안의 경우, 다음주 예비후보등록일 부터 현재 각 선거구로 등록을 한 뒤에 국회에서 선거구가 확정되면 해제될 수도 있어 해당 지역 출마를 앞둔 입지자들은 초비상이다.

영암무안신안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영암무안신안의 유권자들은 선거구 확정 여부에 따라 지지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재 선거법이 현역의원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짜여진 상황이다. 법정시한 위반을 밥먹듯 하는 선거구 획정위와 국회는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

다”고 말했다.

다음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 현수막도 금지되는 만큼 정치 신인들은 높은 ‘현역의 벽’ 앞에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출마예정자는 “정치신인들이 얼굴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수막인데 예비후보등록을 시작하면 이마저도 금지된다”며 “반면 정당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허용되고 현역 국회의원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 강문성 도의원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통과

전남도의회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7일 강문성 의원(여수·3·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강 의원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를 한다면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정당 현수막이 부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자성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그 현수막의 내용, 개수, 장소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서 보행이나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조례는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 게시대에 게시, 정당별 음·문·동별로 2개 이하로 게시,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황지 기자



‘尹 정권 규탄’ 피켓 든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7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 서갑원 “검찰 폭주 바로잡겠다” 순천서 출마 선언

서갑원(사진) 전 국회의원이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전 의원은 7일 순천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일반시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마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서 전 의원은 “4년 전 검찰개혁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이 무도한 검찰 폭주가 자행되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전락공천



의 결과인가”라며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원했지만 검찰 권력에 희생당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한 분이다. 누구보다 검찰을 바로잡을 강한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순천시민들과 함께 그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최황지 기자

## 최치현 “새로운 인물로 교체” 광산을 총선 출마선언

최치현 전 대통령비서실(전 청와대·사진) 행정관이 7일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행정관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자리보전과 권력 싸움에 시간을 허비하는 정치 지형을 바꾸고 정권 교체에 앞장설 새 인물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인물교체로 무도한 윤석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담아낸 ‘7대 파란비전’을 제시하며 “광산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했다. 7대 파란비전은 민주당을 상징한 파란색과 확실히 추진해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뜻으로, 광산뿐 아니라 광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1대 과제와 지역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6대 공약으로 구성됐다.

김은지 기자

## 최희용 “광주 정신 새롭게 확장” 서구를 출마 선언

최희용(사진) 전 이재명 대선후보 광주 특보단장이 내년 총선 광주 서구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단장은 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경제와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부자감세와 검찰을 통한 공포정치를 개혁 타파하겠다”며 “광주정신을 새롭게 확장시켜 미래지향적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과 친일 성향 역사 왜곡 세력 개혁, 경제 위기 극복, 불공정한 예산



편성 등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있는 위기상황을 개선하겠다”며 “누군가는 말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 한가지부터 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출신인 최 전 단장은 광주 출신으로 윤암초, 송암중, 서강고를 거쳐 명지대를 졸업하고 참여자치21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 광주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김은지 기자

## 민주 ‘대의원 투표 비중 축소’ 당헌 개정안 의결

### 현역 하위 공천페널티 강화 비명계 “당 단합 저해”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비중을 축소해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내년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대의원 투표 비중 축소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가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한 사항을 당 지도부가 주도해 강행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당헌 개정안 표결 결과,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중앙위원 605명 가운데 490명이 참석했

다. 당 중앙위원은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60대1 이상’에서 ‘20대1 미만’으로 낮추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권리당원 60~7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인 결과가 된다.

최고위원회는 또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공천을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산 비율을 강화한 것이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당헌 개정안을 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총선 승리에 매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논란을 만들어 당의 단합을 저해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겨냥해 “민주당 꼴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결코 흠족하지 않을 수준이지만 공천 시스템에 변화를 줘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대의원제 축소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당원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양측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으로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 용자

### 연리 1% 저리 지원

전남도가 환경친화 축산 육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24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사업비 200억원을 연리 1%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농업인·법인 30억원, 축산물 유통·가공업 30억원이다.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 4억원,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 6억원이다.

융자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농가, 해협(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등이다.

신규 축산농가는 사업 완료 후 1년 6개

월 이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해협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융자부터 산란계 케이지 사육 면적 기준 강화에 따라 케이지를 교체한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사업 대상자와 사업비는 내년 1월께 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을 바라는 사업자는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황지 기자